

공동선언 3주년, 유엔총회 등 이달 남북관계 개선 분수령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4월부터 정상간 친서 교환
한미연합훈련 이후 대화 단절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다시 띠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73주년 정권 수립일(9·9절)과 9·19 평양 공동선언 3주년에 이어 오는 21일 열릴 제75차 유엔총회 등 남북 대화를 재개할 계기가 연달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서 형태의 친서를 교환했고, 이는 7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성과로 이어졌다. 친서에서 양 정상은 남북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된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한반도 평화 조성 차원에서 남북 간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당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된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 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했다. 지난 5월 문 대통령과 조 바

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공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7월 22일 웨니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노력’도 당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한과 대화는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을 시작한 지난 10일 오후부터 남북 통신선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은 올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김영철 부장은 군사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연초부터 남북,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추진한 게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다만 올해 9·19 평양 공동선언 3주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계기로 대화가 다시 열릴 가

능성은 있다. 북한의 최근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소식에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부는 늘 북한과의 대화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전제로 “이번 유엔 총회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가급적 그런 국제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文 정부 마지막 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일정
내달부터 21일간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일정으로 꾸려진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8~9 일 열리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13~16일 열리며, 분야별로 정치(13일), 외교·안보·통일(14일), 경제(15일), 교육·사회·문화(16일) 순으로 진행한다. 정기국회 기간 중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오는 27일, 29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10월 1~21일 일정으로 열린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방어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25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이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 간 갈등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당은 확장 재정 중요성을, 야당의 경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 위원회에서 “예산 600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수 있다”면서도 “재정 낭비요소를 꼼꼼이 살피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국회 심의를 통해 적시에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 장성민 세계 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은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60조원 가량 많다고 언급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빚잔치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연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정기 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입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 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뉴스1

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언론자유와 동시에 언론의 가짜·허위 뉴스로부터의 피해 구제와 국민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만약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면 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 처리를 막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법 결실

탄소중립법 등 처리

청와대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1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 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8월 31일) 국회 본회의 당시 법안 처리가 이뤄진 데 대해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박 수석은 탄소중립녹색 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 전기통신사업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먼저 탄소중립법에 대해 박 수석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며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군내 성범죄에 대한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이 수사·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 “장군 아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며 “군 성 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초학력보장법 및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충을 덜어 드리는 시급한 민생 법안 도 의결됐다”고 소개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법 제정에 대해 박 수석은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중앙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두고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디지털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최영훈 기자

신임 상임위원장 선출 축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부의장을 포함해 새로운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된 데 따른 취임 축하 차원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이에 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릴 오찬 간담회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시작한 이후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를 위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기국회 기간 논의할 각종 민생 입법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전날(8월 31일) 오후 본회에서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야당 뒷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 등 재분배한 상임위원장단도 선출했다.

국민의힘 뒷 상임위원장으로 윤재옥 정무위원장 조해진 교육위원장,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 등 7명이 선출됐다. /최영훈 기자